국민경제자문회의-KDI 정책 포럼

AI 시대,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NEAC 국민경제자문회의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자문회의-KDI 정책 포럼 「AI 시대,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 발표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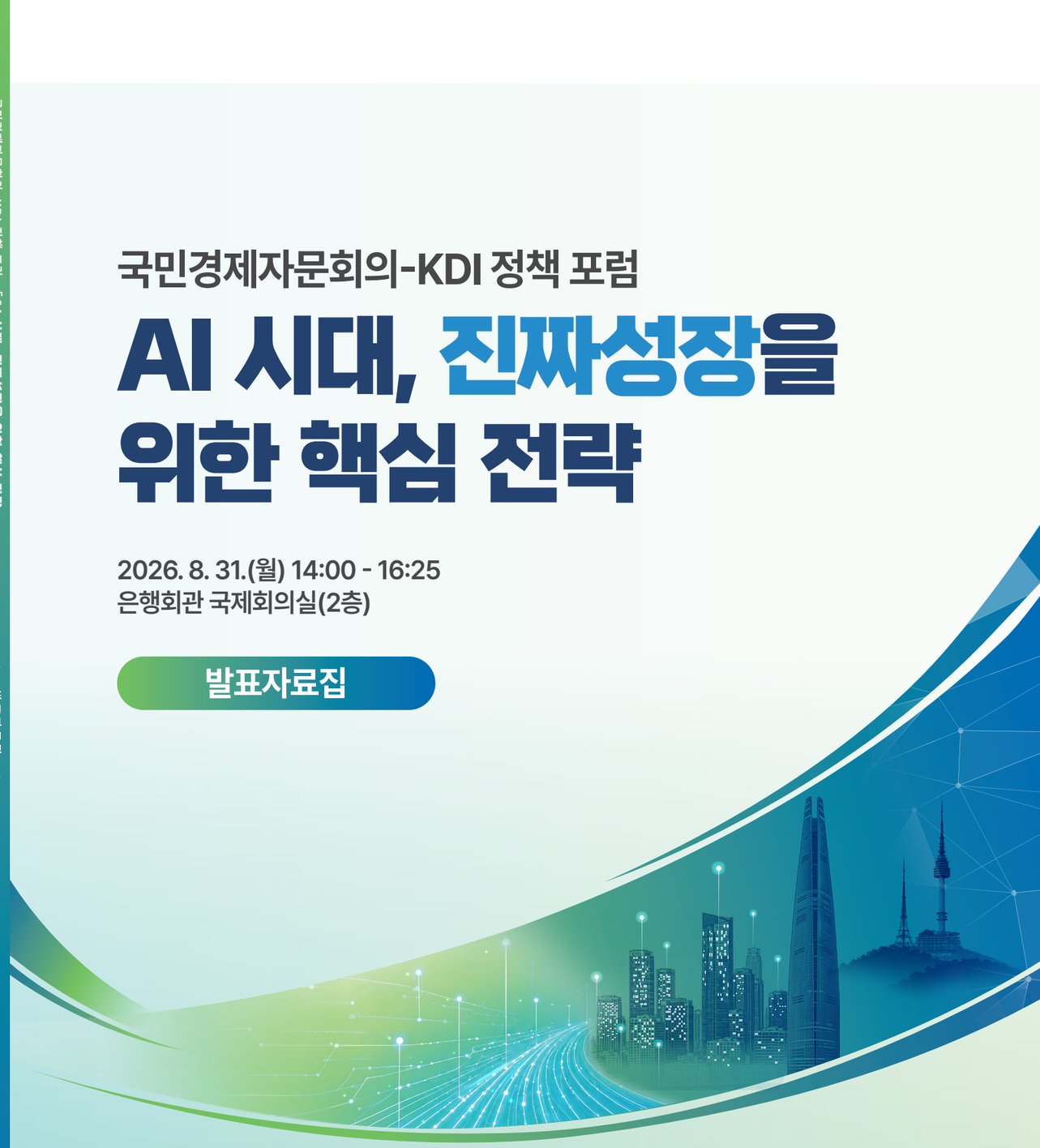
NEAC 국민경제자문회의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자문회의-KDI 정책 포럼

AI 시대,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2026. 8. 31.(월) 14:00 - 16:25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발표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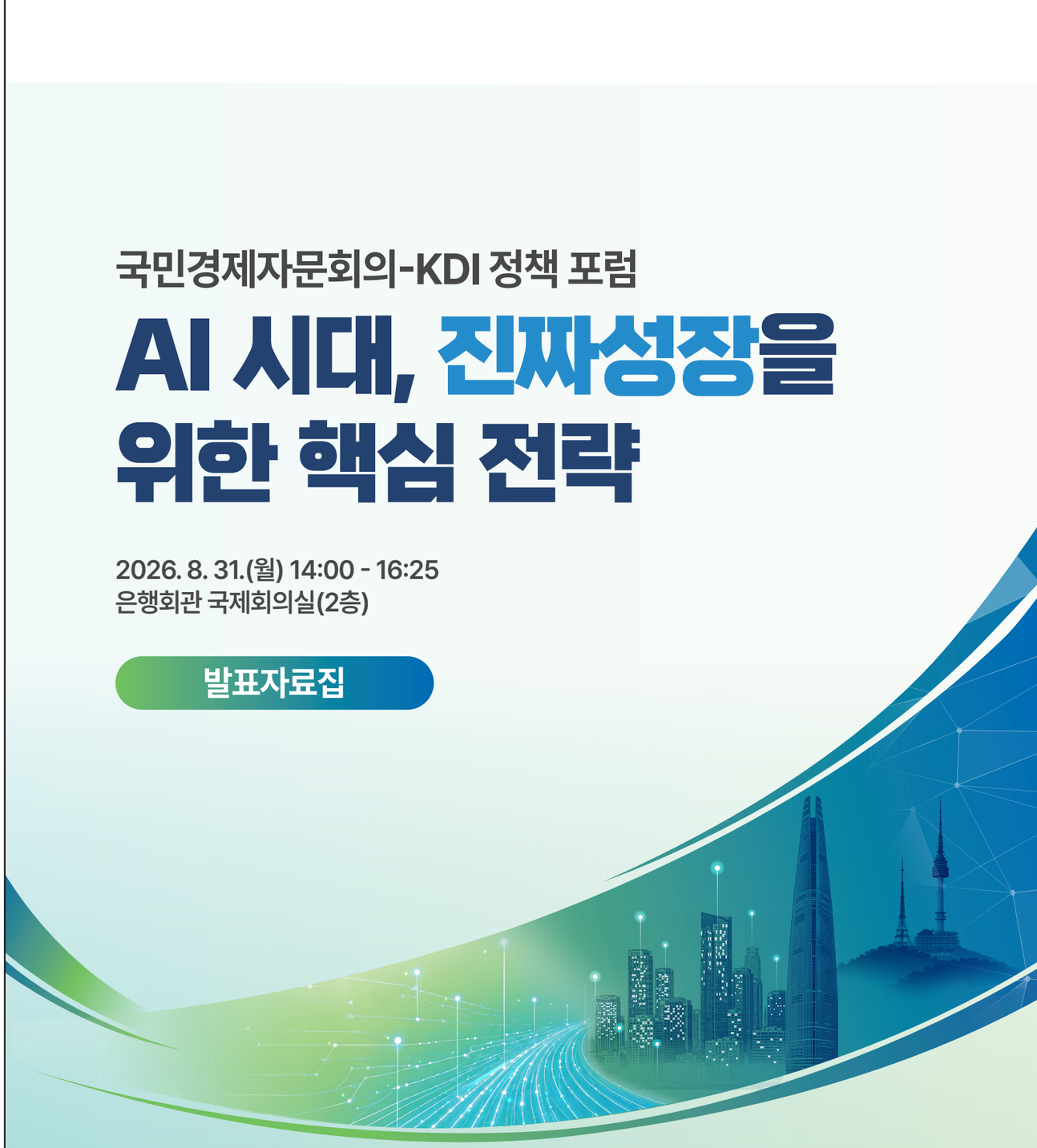
NEAC 국민경제자문회의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자문회의-KDI 정책 포럼

AI 시대,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2026. 8. 31.(월) 14:00 - 16:25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발표자료집



NEAC 국민경제자문회의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자문회의-KDI 정책 포럼

AI 시대,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Contents
목차

05 모시는 글

06 프로그램

07 기조발제

49 패널토론

모시는 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는 AI가 가져오는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AI 시대,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정책 포럼을 개최합니다.

AI는 산업과 노동시장, 기업의 혁신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며 우리 경제의 환경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AI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기술혁신과 성장잠재력 제고 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보완과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자리가 AI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통찰을 공유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성식

KDI 원장
김세직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 - 14:05		**개회선언**
		기조발제
14:05 - 15:05	발제 1	**AI 시대 HI(휴먼 아이디어) 주도 진짜성장 전략** **김세직** KDI 원장
	발제 2	**AI 시대 국가잠재력 회복방안**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15:05 - 15:20		**휴식 및 장내 정리**
		패널토론
15:20 - 16:20	좌 장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토론자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장 **김재준**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이윤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세직** KDI 원장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16:20 - 16:25		**폐회선언**

*프로그램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KDI 정책 포럼

AI 시대,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기조발제

발제 1 **AI 시대 HI(휴먼 아이디어) 주도 진짜성장 전략**

김세직 KDI 원장

발제 2 **AI 시대 국가잠재력 회복방안**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KDI 정책 포럼

AI 시대,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기조발제

발제 1 **AI 시대 HI(휴먼 아이디어) 주도 진짜성장 전략**

김세직 KDI 원장

발제 1

발표요약문

문제 인식

- 한국경제의 장기성장률이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향후 0%대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기존의 투자 확대와 기술·R&D 중심 정책만으로는 성장률 하락을 반전시키는 데 한계
- AI 발전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출발점인 인간의 창의적 아이디어(HI)의 상대적 가치가 더욱 커지는 상황

성장 둔화의 원인

- 경제성장의 핵심은 교육 등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나, 그간 모방형 인적자본 육성에 치중
- 선진국 특허의 벽 및 AI 발전 등으로 기존 지식·기술을 모방하는 방식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
- 막대한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혁신성과와 성장률 개선이 미흡한 것은 기술혁신의 핵심 투입요소인 HI에 대한 투자와 보상체계가 부족했기 때문

정책 방향

- 국가 성장동력을 모방형 인적자본에서 창조형 인적자본으로 전환
- 기술주도 성장을 HI 주도 성장으로 재정립하고, 아이디어 창출·보호·보상이 선순환하는 혁신생태계 구축
- AI·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의 기회를 활용하여 장기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국가적 전략 추진 필요

주요 정책과제

-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도입
  - 독창성이 인정된 국민의 아이디어를 상시 등록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 등록 아이디어에 원작자 명의와 일정 기간의 소유권·재산권 부여

  - 정부 R&D 예산 등을 활용하여 등록 아이디어를 구매하고, 기업·국민에게 유통·경매하는 체계 마련
  - 아이디어 사업화로 발생한 초과수익의 일정 부분을 원작자에게 환원
- 공공부문 정책 아이디어 등록제 확산
  - KDI 등 정책연구기관에서 정책 아이디어 등록제를 우선 도입
  - 정책 시행으로 발생한 예산절감·사회적 편익 등을 평가하여 원작자에게 보상하는 이익 환급제 검토
  - 정부부처·연구기관·대학 등으로 적용 범위 단계적 확대
- 학생·근로자 대상 HI 교육 강화
  - 정답이 없는 열린 문제 해결과 발명형 사고를 중심으로 한 창의력 교육 확대
  - 대학입시 및 교육과정에서 창의성 평가와 창조형 수업 비중 강화
  -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기대효과

- 국민 다수가 아이디어 창출에 참여하는 대중 기반 혁신체계 조성
-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사업화 촉진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창출
- 한국형 애플·엔비디아와 같은 혁신기업의 출현 기반 마련
- AI 시대 국가·기업·개인의 경쟁력 제고 및 장기성장률 반등에 기여

결론

-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기술 자체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만들어 내는 인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있음
- HI에 대한 교육·보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아이디어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발제 1

AI 시대 HI(휴먼 아이디어) 주도 진짜성장 전략

AI × 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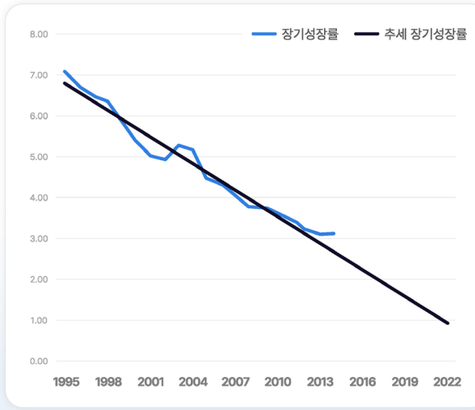
KDI 원장 김세직

CHAPTER 01

AI시대, 한국경제 핵심 문제: 성장 위기

01 5년 1%하락의 법칙

김세직 (2016) 5년 1%하락의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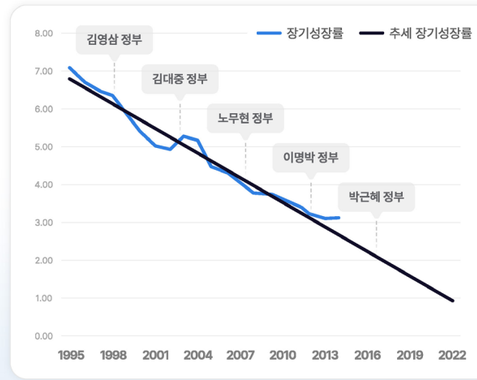


한국 경제는 **지난 30년 간**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 경제의
진짜 성장능력을 나타내는 **장기성장률**이
매 5년마다 1%포인트씩 또박또박
직선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옴

02 5년 1%하락의 법칙

5년 1%하락의 법칙 **정치도 이기는 강력한 법칙**

김세직 (2016) 5년 1%하락의 법칙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장기성장률이 **매 정권마다 1%포인트씩 하락**

정권별 장기성장률 1%

- 김영삼 정부 **6%대**
- 김대중 정부 **5%대**
- 노무현 정부 **4%대**
- 이명박 정부 **3%대**
- 박근혜 정부 **2%대**
- 문재인 정부 **1%대 추정**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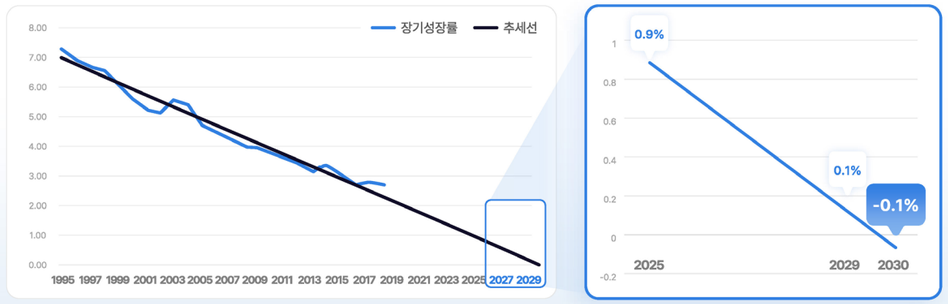
발제 1

03 Zero 성장/ 마이너스 성장

5년 1%하락의 법칙에 따른 30년간의 성장추락의 결과

- **2025-26년 마침내 추세장기성장률 0%대 진입 추정되어왔음**
- **성장추락을 막지 못하면, 2030년경에는 마이너스 성장 진입할 가능성도**

김세직 (2016) 5년 1%하락의 법칙



04 새정부의 최대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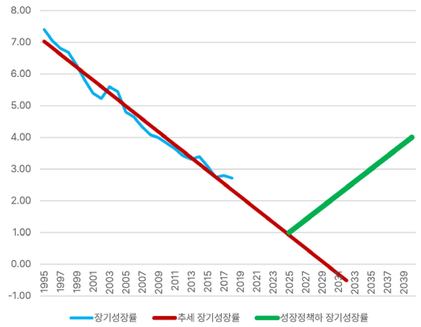
→ 진짜성장으로 5년 1%하락의 법칙을 저지해
장기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

→ 이를 위해 예컨대 '5년 1%p 상승' 을 목표로
국가적 총력전 펼쳐야

● 새 정부도 '진짜성장'을 목표로
3대 전략을 제안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2025.6)

● AI 시대의 도래와 25년 말 이후 반도체 수퍼 호황
→ 진짜성장을 위한 황금의 기회: 이 기회를 잘 이용해야!
→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5년 1%p 상승의 성장정책



AI 시대 HI(휴먼 아이디어) 주도 진짜성장 전략

CHAPTER 02

성장추락 원인

01 경제성장의 원동력 : 인적자본

- 로버트 솔로우 교수의 전통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투자만으로는 지속적 성장 달성 불가. 기술진보 있어야**
- \+ 95년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창도한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한마디로 교육 등을 통한 인적자본(human capital) 축적!



인적자본이란?

교육 등을 통해 사람(not 기계)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이나 기술

현대 경제성장이론에 따르면 성장추락의 원인

인적자본 축적의 정체와 그에 따른 기술 정체 때문

발제 1

02 현대 경제성장이론

90년대 이후 인적자본 축적 정체의 원인 : 엉뚱한 인적자본에 투자했기 때문

- 인적자본은 두가지 종류 (김세직, 정운찬(2007))

01

모방형 인적자본

기존 지식이나 기술의
모방을 통해 익힌 인적자본

짝퉁 만드는 능력

02

창조형 인적자본

새로운 지식/기술/아이디어를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인적자본

오리지널 만드는 능력

03 시대착오적 모방형 경제체제

60-80년대 **모방형 인적자본 축적**과 이를 통한 **모방형 기술 진보**로 빠르게 성장,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01 90년대부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20년 정도 감소**

- 20년 **특허**로 보호되는 선진국 기술
  모방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

특히 최근
02 **AI의 발달**

- 남이 만든 기존 지식이나 계산능력을 머릿속에
  넣은 인간의 **모방형 지식노동이 무용지물화**

그럼에도 **모방형 교육 통해 모방형 인적자본/기술에만 잘못 투자하고 모방형 경제체제를 유지**
→ 기업들이 남이 만든 아이디어 **살짝만 바꾸고도(훔치고도) 마치 새 기술 창조인 것처럼 착각하니, 혁신적 기술 안 나옴**

김세직, 정운찬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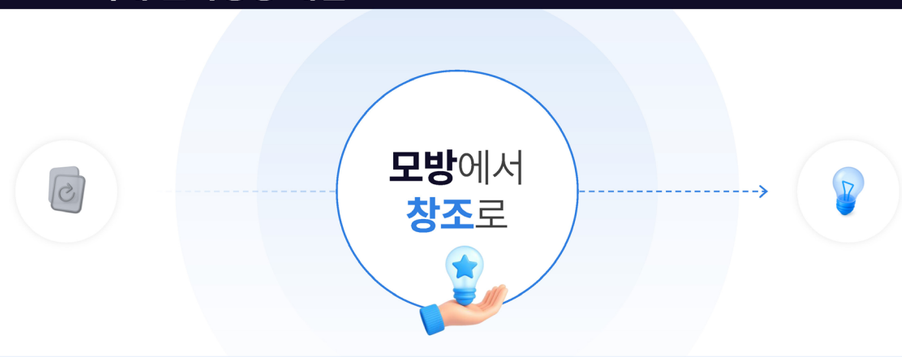
5년 1%하락의 법칙에 따른 성장추락(제로성장) 위기

CHAPTER 03

AI 시대 위기의 해법 : HI 혁명

AI는 전문지식의 역할을 바꾸고,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는 HI의 가치를 끌어올려

01 AI 시대 진짜성장 해법



국가 성장동력을 모방형 → **창조형 인적자본(기술)으로 전환**

**이렇게 해야만이 기업들이 AI시대 생존수단인 혁신적 기술을 개발,
제품화, 생산 ,수출해 성장할 수. 특히 AI 시대에!**
→ '기술주도 성장', '혁신 성장' 가능해져

발제 1

02 과거에 '기술을 통한 성장' 실패의 원인

한국 R&D 패러독스! → **기술 투자 실패 원인**

지난 10-20년간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기술에 막대한 투자**: GDP대비 R&D 투자
2%대 → 5%
→ 돈은 늘었지만, 혁신은 충분히 늘지 않아
→ 장기성장률은 0%대로 (기술 투자 실패)



기술과 R&D의 핵심 인풋이 돈이 아니라
HI (휴먼 아이디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부재

(예: 이전 정부 아이디어 공모 시 전국 1등 상금이 고작 300-500만원)

→ 아이디어에는 전혀 돈을 쓰지 않고, 기술에 대한 물량투자(100조 이상)에만 집중

→ 혁신적 아이디어 나오지 않으니 혁신적 기술 나올 수 없음
(HI -- 기술혁신의 bottleneck!)

R&D의 핵심 인풋은 자금만이 아니라, 혁신을 촉발하는 HI!

AI 시대에 기술주도 성장은 HI 주도 성장이어야!

03 AI 시대 최고의 생산 요소

01 **AI 시대 최고의 생산요소는 기술**

치열한 **기업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 통해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가 핵심
(**기술주도 성장, 혁신성장**: Aghion and Howitt)



02 **새로운 기술은 아이디어와 전문지식의 결합**

새로운 기술은 두가지 요소의 결합, 즉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이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이과적) 전문지식**의 결합으로 이루어짐

기술 = 아이디어 (스티브 잡스) + 전문지식/기술 (스티브 워즈니악)

03 **AI 발전으로 아이디어가 더욱 중요해짐**

AI가 발달함에 따라 (이과적) 전문지식(스티브 워즈니악)을 AI가 해결, **AI가 워즈니악의 역할**을 대신 해 줌

이 중 **'HI'**가 더욱 중요해짐



AI × HI

AI 시대의 새로운 생산함수

새로운 기술은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합.

HUMAN IDEA
무엇을 만들지.
문제 정의 · 콘셉트 · 발명 · 방향성

X

EXPERTISE (AI)
어떻게 만들지.
공학 · 코딩 · 설계 · 실행 지식

=

새로운 기술
차별화된 제품 ·
생산성 · 수출 · 성장

AI의 발전 → 전문지식의 접근성 확대 → 아이디어의 상대적 중요성 상승

AI × HI | HUMAN IDEA-LED GROWTH Source: Aghion & Howitt; 원본 발표자료 09

04 AI 시대 기술주도 성장 = HI 주도 성장

결국 AI 시대 최고의 생산요소는
전문지식/기술이 아니라



HI (휴먼 아이디어) ⋮ **사람(휴먼): 창조형 인적자본 (=창의력)**

발제 1

05 인간이 만든 휴먼 아이디어의 가치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의 가치는 천문학적!**

비트코인: 1.3 조 달라 (Aug, 2026)
→ 2008년, **'정부 아닌 민간이 분산원장 이용해 발행하는 가상화폐'라는 아이디어**

애플: 4.5조 달라(한국 GDP의 두 배 이상)
→ 2007년, 핸드폰(스마트폰) 기술의 핵심 → **'손 안의 컴퓨터' 라는 아이디어**

Magnificent 7 (애플 등 세계 시총 최상위 기업) : **모두 기술기업**
→ 그 기술의 핵심이 아이디어이기에 결국 **모두 아이디어 기업**

STRATEGY

HI 주도 성장: 3가지 레버

아이디어가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생태계를 제도·시장·교육으로 동시에 설계

01 권리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명예와
일정 기간의 재산권을 보호

02 보상

HI를 낸 사람에게 충분하고
공정한 경제적 보상이
돌아가게

03 교육

학생·근로자가 정답 없는 문제를
풀며 창의력을 훈련하게

제도 + 시장 + 학습 = 아이디어가 반복적으로 분출되는 혁신생태계

AI × HI | HUMAN IDEA-LED GROWTH

Source: 김세직 (2021), 원본 발표자료 11

06 HI 주도 성장 전략

'모방에서 창조'로의 전환 통한 'HI 주도 진짜성장'위해
HI와 기술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혁신생태계(**창조형 자본주의 체제**) 구축이 필수적

다음 세가지가 필수 **'모방과 창조'(2021)**

01 **HI에 대한 재산권 보장 제도 도입**
AI 시대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컬럼버스의 달걀'처럼 도둑맞기 쉬운 아이디어
재산권을 보장해줘야만, 국민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낼 인센티브가 생기기 때문
예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아이디어 공적 구매제도**

02 **HI에 대한 강력한 재정(조세-보조금 인센티브)제도 도입**
예 창조형 기업 법인세 감면 제도

07 HI 주도 성장 전략

03 **국민(학생, 근로자)들이 HI를 생각해내는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제도 도입**
예 **열린 문제 창조형 수업**, **창의력 평가 기반 대학 입시**, **근로자 창의력 재교육 프로그램**

AI 등 신성장 산업에
아무리 기술을 강조하며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새로운 HI 없이 새로운 기술 나올 수 없어!!

발제 1

CHAPTER 04-1

전국민 아이디어(모두의 아이디어) 등록제:

01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 HI 주도 성장 위해 **김세직 (2020, 2021)**에서 제시한 **'전국민(모두의) 아이디어 등록제'** 도입해야

"한마디 생각(아이디어)이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김세직 (2021) '모방과 창조 ' p.258



* **지식재산처 (2026):**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모두의 아이디어' 성공적 도입
* **KDI (2026):**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의 초기 버전인 **'KDI 정책 아이디어 등록제'** 도입, 시험 중

LEVER 01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한마디 생각이 명예가 되고, 권리가 되고, 시장에서 보상받게 하는 국가 차원의 아이디어 인프라

상시 등록

일회성 공모가 아니라, 독창성 평가를 거친 아이디어를 연중 등록

권리 부여

아이디어 원작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명예와 일정 기간의 소유권을 부여

공정 보상

정부 구매·플랫폼 거래·초과수익 환원을 통해 시장가격에 가까운 보상을 설계

핵심 전환 | 아이디어를 의견이 아닌, 기록·평가·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Source: 김세직 (2020, 2021); 원본 발표자료

OPERATING MODEL

아이디어가 가치가 되는 4단계

등록제는 평가·권리·구매·확산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

01 등록
국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상시 접수

→

02 독창성 평가
새로움을 객관적으로 판정

→

03 권리·구매
이름·권리 부여와 정부 구매

→

04 플랫폼 확산
기업·국민과 거래, 성과 환원

설계 원칙 | 공정한 평가 · 투명한 권리 · 충분한 보상 · 빠른 사업화

Source: 원본 발표자료의 제도 제안

발제 1

01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01 **전산시스템에 아이디어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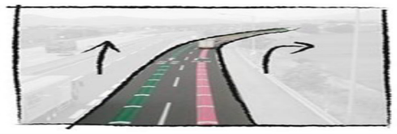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아이디어로 판명(**독창성 평가**)된
모든 종류의 아이디어에 대해
정부의 전산시스템(전아등 포털)에 등록

(공모제처럼 일회성 아니라,
독창성 평가 후 일년 중 상시 등록)

+

02 **명예 & 소유권 부여**

그 아이디어를 만든 국민의
이름을 붙여주어
명예와 **(10년) 소유권/재산권**을 부여
(아이디어 재산권—Idea Property Rights 보호법:
지재처, KDI 입법 추진 협의)
예) 고속도로 입.출구의 색깔 유도선
→ '윤석덕 고속도로 색깔 유도선'



02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03 **커다란 경제적 보상**

+

이에 더해 등록된 아이디어들을
정부 R&D 예산으로 **정부가 직접 구매**
(예, 천만원)

정부는 구매한 아이디어들을
'**전아등 플랫폼**'에서 '**경매**'를 통해 **기업/국민들에게 판매**
(정부가 정하는 공모제 상금과 달리 **시장가격**으로 가치 평가)
→ **초과수익**(예, **백 억, 천 억원**)은 아이디어의 **원작자인**
국민에게 되돌려 줌

→ 국민들에게 아이디어에 대해 **충분한 그리고 공정한 (시장가격) 경제적 보상**

→ 제도가 도입되면, **한두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분출 (모두에 의한 성장)

→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로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 재점화** 가능

03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 모두의 성장

'모두의 성장' 전략

그동안 우리나라 기술정책: '**소수 엘리트 기반**' 기술정책
(기술개발을 **일부 대기업**이나 **(이과) 전문연구 인력**에만 의존)

→ **전국민 아이디어(모두의 아이디어) 등록제: '대중기반 기술 정책'**
새로운 혁신적 아이디어를
소수의 엘리트 (대기업, 이과 연구원) 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수많은 일반 국민(대중)이 혁신적 아이디어 내게 만들어

→ **'아이디어 개수'를 크게 늘리는 것**

아이디어 개수 늘리는
'모두에 의한 기술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통계학적 법칙 때문

아이디어 하나가 성공할 확률이 **10%**일 때,
한 사람만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면
성공할 확률은 **10%**에 불과,

그러나 **국민 30명**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그 중 하나라도 성공할 확률은 **100%**에 근접
→ **나라 입장에서는 거의 100% 확률로 성공** 100%

정부 R&D예산의 1/30인 **1조**만 투자해서 아이디어 하나 당 **천만원** 지불하면,
10만개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국민들로부터 → 이중 2-3개만 비트코인급 아이디어여도 **1조 투자로 2천-3천조 수익**

CHAPTER 04-2

KDI 정책 아이디어 등록제

발제 1

01 KDI 전직원 정책 아이디어 등록제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정책 연구소인
- **KDI** 내에서 **국내최고 정책 전문연구기관인 'KDI 전직원 아이디어 등록제'**로 먼저 도입
- **김세직(2021, 2022)** 제안에 따라 **'정책 아이디어'**에 한정해서 먼저 도입
(혹은 **'금융 아이디어', '창업 아이디어'** 등으로 한정해서도)

KDI 전산시스템에 아이디어 등록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로 판명된
아이디어에 대해
KDI의 전산시스템에 등록

+

명예 & 소유권 부여

그 아이디어를 만든 연구원의
이름을 붙여주어
명예와 **KDI 내에서의 (10년) 소유권/재산권**을 부여

예) 김미루, 김세직 "다회전 지역화폐/소비쿠폰"

기존의 일회전 소비쿠폰에 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가 훨씬 커서 수조원의 예산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화폐/소비쿠폰

02 KDI 전직원 정책 아이디어 등록제

경제적 보상 위해 **'정책 아이디어 이익 환급제'** 도입 제안

커다란 경제적 보상

+

정책 아이디어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업에 판매 불가
→ 등록된 정책 아이디어들이 **국가에 기여한 이익을**
→ **정부/KDI가 평가**하여
정부가 그 기여분의 일정부분(예, 0.1%)을 아이디어 원작자 연구원에게 환급

→ 연구원들에게 **아이디어에 대해**
충분한 경제적 보상

→ **다른 연구소**들도 도입: **'전 연구소 정책 아이디어 등록제'**로 확대
+ 정부부처 + 대학
→ **전국민**들로 확대: **'KDI 전국민 정책 아이디어 등록제'** 로 확대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제 참여 아이디어도 등록 - 독창적 아이디어 여부 평가)
→ 공모제 이후에도 계속 권리 유지 + 보상 가능성

→ 제도가 도입되면, 수많은 연구원/공무원/국민들로부터 분출된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들로 국가 성장의 새로운 동력 재점화

CHAPTER 05

전국민 HI 교육 (학생/근로자)

LEVER 02

전국민 HI 교육: 학생과 근로자

혁신의 기반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능력이 계속 향상되는 것.

STUDENTS | 열린문제 창조형 수업

정답이 없는 문제를 풀며,
상상 → 논리 → 발명으로 연결

+

WORKERS | 현업 아이디어 교육

담당 업무의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독창적 해결책을 실제로 시도

교육의 목표 | 잘 외우는 사람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푸는 사람

AI × HI | HUMAN IDEA-LED GROWTH

Source: 김세직 (2021), 원본 발표자료

발제 1

01 창의력(HI) 교육 프로그램

많은 **학생 + 근로자**들로부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 하려면 학생+근로자들의 **아이디어 생각하는 능력 키워줘야**
→ 특히 초중고, 대학에서 모방형 인적자본만 키운 **2900만 근로자들의 창의력** 키워주는 프로그램 **(김세직, 2021)**

'열린문제 창조형 수업'(=발명수업)

열린 문제 해결 훈련



마그리트의 그림 '빛의 제국'
과 같은 일이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일년내내 섭씨 30도가 넘는 불나라에서
얼음을 화폐로 도입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혹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화폐를
상상해 제시하시오' – 답: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정답없는 **열린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창의적 **아이디어 생각 능력**(창조형 인적자본)을 훈련

02 창의력(HI 능력) 키우는 일곱가지 방법

아이디어 창출 능력(창의력): 천재나 타고나는 것이 절대 아님 → 누구나 열심히 훈련하면 아이디어 능력 크게 향상

(아이디어 발명 훈련 수업)

비현실적 상상을 발명 아이디어로 연결

졸저 **'어웨이킹'(2024)**에서 제시하는
'창의력을 깨우는 일곱가지 방법'을 배워

열린문제 풀면서 적용하며 훈련

→ 비현실적인 것을 상상하고
이것이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논리적인 경우를 찾아내 **현실화하는 방법,**

즉 **발명 아이디어 생각하는 방법을 훈련**



김세직(2024) 어웨이킹 p.48-207

AI 시대 HI(휴먼 아이디어) 주도 진짜성장 전략

CREATIVE PRACTICE

창의력을 키우는 7가지 훈련

『어웨이킹』(2024)

1. 비현실적으로 상상하기
2. 논리적으로 상상하기
3. 다르게 생각하기
4. 기존의 것에 의문 던지기
5. 파격적으로 상상하기
6. 내 생각을 밀고 갈 용기
7. 실패하며 계속 훈련하기

열린문제를 풀 때 7가지 방법을 반복 적용해 비현실적 상상을 발명 아이디어로 연결

03 근로자 아이디어 교육

훈련 후 실제 회사 내 담당 분야에 적용

'열린문제 창조형 수업'에서
'창의력 키우는 일곱가지 방법' 통한 훈련 후에
실제로 회사에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분야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도전
(예: 금융회사,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은
금융삼품 개발 아이디어)

+

창의력(아이디어) 수업 효과

필자가 강의한 '한미 글로벌 창조스쿨'
10주 프로그램 수강 후
수강생 창의력 70% 상승

창의력(아이디어) 수업 성공사례

필자의 화폐금융론 들은
두나무 송치형 회장

발제 1

CALL TO ACTION

지금 필요한 것은 HI에 투자하는 국가적 전환

AI 시대의 경쟁은 실행만의 경쟁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상상하고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의 경쟁

01 아이디어를 인정하라

기록하고, 권리를 부여하라.

02 아이디어에 보상하라

공정한 가격과 수익을 연결하라.

03 아이디어를 훈련하라

학생과 근로자의 창의력을 키워라.

AI × HI | 기술주도 성장을 HI 주도 성장으로 완성

감사합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Human Ideas

AI × HI | 진짜성장 전략

MEMO

국민경제자문회의-KDI 정책 포럼

AI 시대,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기조발제

발제 2 **AI 시대 국가잠재력 회복방안**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발제 2

발표요약문

AI 시대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 기존의 추격형·투입형 성장에서 벗어나 인재·AI 수요·데이터·지역을 연결하는 생산성 중심 성장체제로 전환

- AI 확산에 따른 중간숙련 일자리 감소와 초고숙련 인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성장정책과 재교육·전환훈련·노동이동 지원을 함께 설계

교육체계는 평균적 인재의 대량양성에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평생 재학습 중심으로 전환

- 획일적 평균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융합역량·문제정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은 지식전달기관에서 학생별 학습경로를 설계하는 'Gallery–Curator'형 교육기관으로 전환

- AI로 인적자본의 감가상각과 직무변화가 빨라지는 만큼 역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재교육을 통해 회복시키는 (s,S)형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을 평생 재학습 플랫폼으로 개편

AI의 기술 공급뿐 아니라 기업의 활용과 수요를 확대하고, 교육·산업·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AI 확산체계를 구축

- 서울대 ABS·ABC와 같이 청년 AI 인재양성과 기업 최고경영자의 AI 활용역량을 함께 높이는 모델을 지방대학·지역기업으로 확산하여 청년–기업, 교육–산업, 수도권–지역을 연결하는 혁신생태계 조성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개인·가구·기업·지역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하여 증거기반 정책의 국가 인프라를 구축

- 인구·가구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지역·공간데이터를 연계하여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인구이동·기업입지·고용·재정지출 등을 함께 분석하여 복지·조세·산업정책뿐 아니라 청년 유출과 지역소멸 대응에도 활용

궁극적으로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인재·수요·데이터·지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성장정책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

AI 시대 국가잠재력 회복방안

교육 · 데이터 · 지역 · 기본 4종을 연결한 국가운영체계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장

국민경제자문회의 · KDI 공동 컨퍼런스
2026. 8. 31

01

핵심 명제: 기술보다 연결

AI 시대 성장잠재력 회복은 "AI 자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재설계 문제입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인재 · 수요 · 데이터 · 지역을
얼마나 빨리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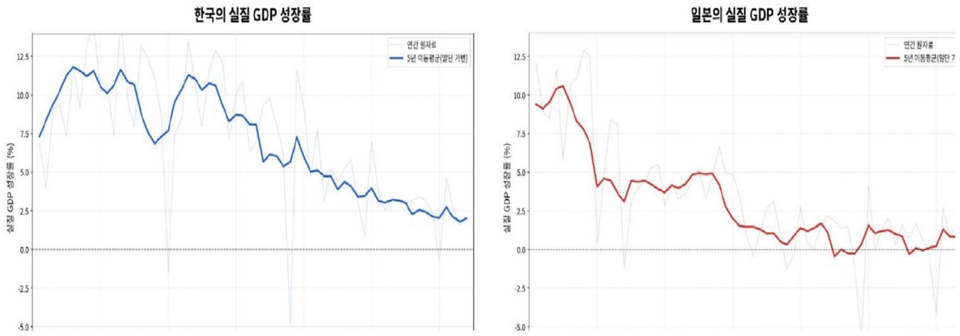
- 성장둔화와 AI 충격: 왜 지금 국가잠재력인가
- 교육·평생학습·수요 확산: 사람을 키우고 현장으로 연결
- 국가데이터처: 데이터·측정·평가의 공통 인프라
- 기본 4종: 자립을 먼저 돕고, 남는 위험을 정밀하게 보완
- UBI의 불가능한 삼위일체와 지역화폐형 타게팅의 의미

02

발제 2

왜 지금 성장잠재력인가

한국의 성장경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의 경험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과거 성장모델의 연장이 아니라,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운영체제입니다.

다음 30년의 선택

성장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대응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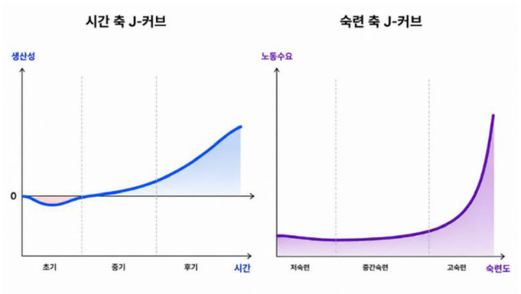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30년

AI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문제는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수요 재편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입니다.

AI 시대: 두 개의 J-Curve

서로 다른 가로축, 서로 닮은 J-커브



시간축 J-Curve

초기 혼란과 전환비용을 지나
조직 학습 후 생산성 상승

숙련축 J-Curve

중간숙련층의 노동수요는 큰 압박 받음,
문제정의·목표설정·AI 활용 역량 수요는 급상승

따라서 정책은 소득보전만이 아니라 재교육·전환훈련·노동이동 지원까지 묶어야 합니다.

AI와 인구구조 변화의 연결

개별로는 마이너스처럼 보이는 변화도 결합하면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노동공급 감소

AI 충격

저·중숙련 노동 대체
노동수요 재편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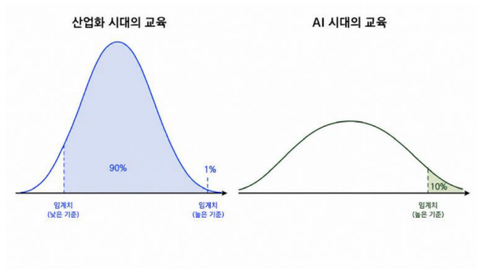
사람을 보호하되
역량과 이동성을 키움

국가는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역량과 이동성을 지켜야 합니다.

발제 2

교육의 목표와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평균 성취를 올리는 교육에서, 개인별 강점과 질문을 키우는 교육으로.



과거의 질문

"평균 성취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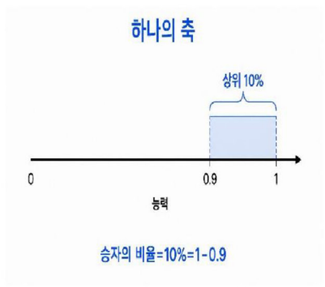
AI 시대의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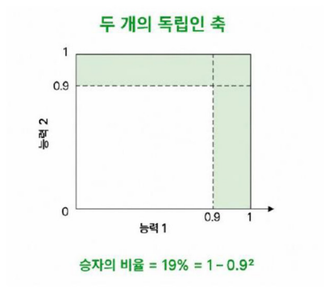
**"문제를 정의하고, 결합하고,
새로 만들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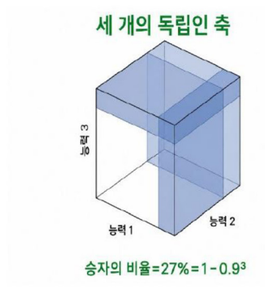
정답 소비자에서 질문 생산자로: AI 시대 교육혁신의 출발점입니다.

선택과 집중, 더 많은 축, 더 많은 승자

능력의 차원이 늘어나면 더 많은 승자가 배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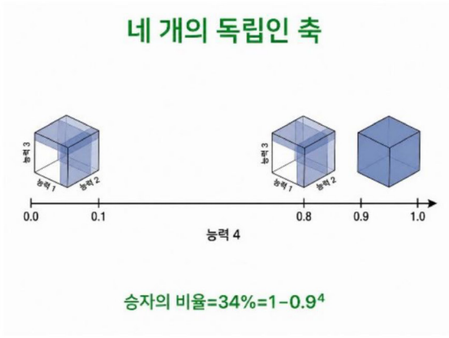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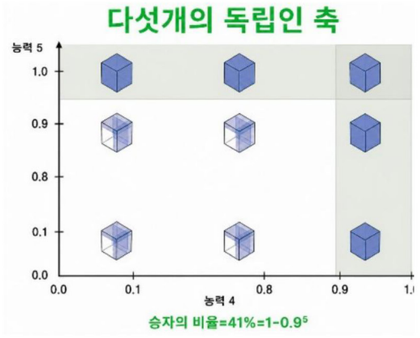


다양성은 생산성입니다.

다양성은 자존감이자 생산성입니다

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각자의 장점을 찾게 해주는 교육체계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목표는 한 명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더 많은 축에서 더 많은 승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 모델: Gallery-Curator로 전환

학생은 정답 소비자가 아니라 질문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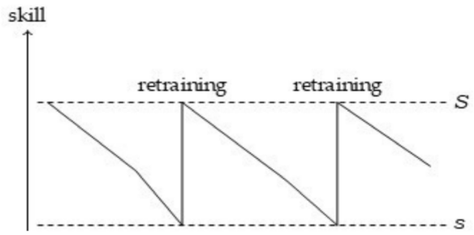
교수	지식 전달자	큐레이터
학생	표준 경로	맞춤형 학습경로
교육	강의 중심	프로젝트 · 문제해결

**대학은 일회성 교육기관에서
평생학습·재학습의 열린 플랫폼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발제 2

(s,S)형 평생교육: Learning State

인적자본도 재고처럼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반복적으로 "주문"해야 합니다.



- AI는 인적자본의 감가상각 속도를 높입니다.
- 역량이 s 이하로 하락하면 재교육을 통해 S까지 회복합니다.
- 청년 교육·재직자 전환훈련·CEO 교육·지역대학 혁신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습니다.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ABS·ABC: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혁신

AI 인재는 공급만으로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현장의 수요 창출 역량이 함께 커져야 합니다.

ABS

AI BigData Specialist
청년 대상 · 7개월 · 1,040시간
산업연계 캡스톤

ABC

AI BigData CEO
CEO·임원 대상 · 6개월 · 156시간
AI 활용 전략과 문제정의

핵심은 연결 청년 ↔ 기업 교육 ↔ 산업 공급 ↔ 수요

AI 전환에는 Big Model뿐만 아니라 Big Demand가 필요합니다.

Big Demand: AI의 현장 확산 없이는 생산성 혁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AI 활용 역량은 대기업·수도권·연구실 밖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돼야 합니다.

- 기업 현장의 문제를 AI 과제로 번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 CEO와 임원의 AI 수요 창출 역량이 조직과 구성원의 성과를 결정합니다.
- 공공부문은 구매자·실험장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 지역·중소기업까지 확산돼야 지방도 살고 청년도 삽니다.

Big Model 경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Big Demand를 전국적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소버린 AI: "3위"는 기수가 아니라 서수입니다

모델 하나하나의 순위 경쟁에 매몰되지 말고 공급과 수요를 아우르는 시스템 경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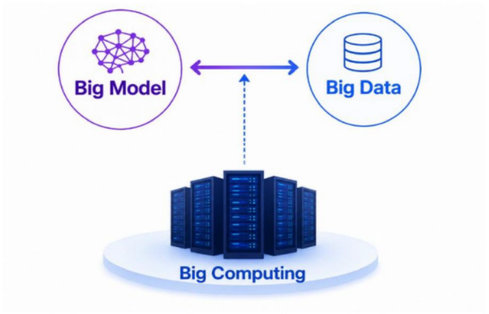
-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AI 주권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 진정한 AI 강국은 모델·데이터·컴퓨팅을 결합해 AI를 가장 잘 쓰는 국가입니다.
- 한국의 승부처는 산업화·확산·현장 적용 역량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 역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모델 순위 경쟁 → 시스템 경쟁으로 전환

발제 2

AI 3대 축을 Big Application으로 연결

모델·데이터·컴퓨팅은 현장 확산으로 이어질 때 성장잠재력을 높이게 됩니다.



- Big Model: 고성능 모델과 특화모델 개발·개량
- Big Data: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활용
- Big Computing: 학습·추론·검증 인프라
- Big Application: 제조·의료·교육·금융·행정·지역으로 확산

AI 주권의 본질은 "차단에도 작동하는 회복탄력성"과 "전국적 확산 능력"입니다.

15

국가데이터처: 성장정책의 새로운 인프라

연결된 문제를 풀려면 연결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연계 기반

-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 기업통계등록부
- 지역·공간 데이터
- 연계된 소득·자산·고용·연금·복지 등 데이터

운영 원칙

- 집행과 측정의 분리
-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제3자가 측정·평가
- 안전한 데이터 연계
- 정책의 사전 시뮬레이션과 사후 평가
- 정밀한 복지·조세·산업·고용 분석

국가데이터처는 국가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16

기본 4종: 국가의 기본체계를 다시 세웁니다

정확히 연결하고, 같은 잣대로 재며, 스스로 설 역량을 키우고, 그래도 남는 위험을 두텁게 보완합니다.

기본 데이터	기본 측정	기본 훈련·기본 정책	기본 구제
통계등록부 중심 연계 인프라	개인화 단일 통합소득지표	생애주기 반복 직업훈련, 주택연금	Targeted Basic Income, 최후의 국가 안전망

먼저 정확히 연결하고, 같은 잣대로 재며, 스스로 설 역량을 키우고, 남는 위험을 집중 보완합니다.

17

기본 데이터와 기본 측정

정책의 우선순위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된 데이터가 보여주는 취약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기본 데이터

- 개인·가구: 인구, 교육, 고용, 소득, 자산, 주거, 복지, 연금
- 기업·사업체: 매출, 투자, 고용, 정부지원, 특허, 수출입, 에너지
- 국가데이터처 중심의 표준화·연계·품질관리

기본 측정

- 시장소득 + 공적이전 – 조세·사회보험료 + 자산의 잠재 소득흐름
- 가구 단위 통합소득 ÷ √가구원 수 = 균등화 통합소득
- 정책 전후에 걸친 분배효과를 같은 잣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잣대로 재야 정책의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같은 잣대로 재야 정책 간 의미 있는 비교평가가 가능합니다.

18

발제 2

기본 훈련·기본 실행·정밀 지원

현금 이전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립 경로를 열고, 남는 위험을 정밀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기본 훈련

- 청년·재직자·중장년을 잇는 (s,S)형 반복훈련
- ABS·ABC처럼 인재 공급과 기업 수요를 함께 육성
- 지역대학을 평생학습·전환훈련 플랫폼으로 재설계

기본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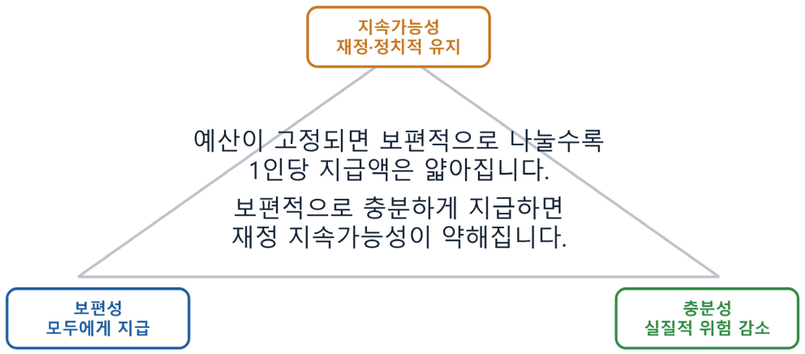
- 주택연금으로 house rich, cash poor 계층의 유동성 갭 완화
- 소멸지역·청년·취약층에 재정여력을 집중
- 현 정부의 소멸대상 지역화폐 지급도 크게 보면 "전국적으로는 타게팅, 지역 안에서는 보편성"을 결합한 설계
- 기본소득형 현금지원은 예산제약과 충분성을 고려해 targeted safety net으로 설계

훈련과 주택연금 활성화로 자립 역량을 먼저 키우고, 남는 위험은 두텁고 정밀하게 보완합니다.

19

UBI의 불가능한 삼위일체

보편성 · 충분성 ·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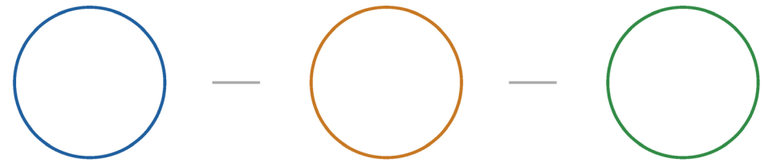


따라서 지금 양보해야 할 것은 "취지"가 아니라 "무조건적 보편성"입니다.

20

보편성의 재설계: Globally Targeted, Locally Universal

소멸대상 지역화폐 지급은 넓은 의미에서 이미 타게팅을 포함합니다



전국
모든 국민에게
동일 지급 아님

소멸위험 지역 선별
전국적으로는
targeting

지역 안 보편 지급
선별된 공동체 안에서는
universal

정책적 의미 지역 · 가구 · 개인 단위의 타게팅을 기본 데이터와 기본 측정으로 더 정교하게 결합해야 합니다.
전형적 UBI라기보다 "targeted basic income"의 지역형 변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

통합 운영체제: 성장과 포용은 별개가 아닙니다

교육·AI 확산·데이터·기본 4종을 하나의 사이클로 묶어야 합니다.

인재
교육혁신
평생학습

수요
기업·공공·지역
AI 문제정의

실행
기본 4종
정밀 안전망

데이터
국가데이터처
정책효과 측정

성장은 사람을 키우고, 포용은 누구나 다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22

발제 2

마무리: 사람을 키우는 국가 운영체제

AI 시대 국가잠재력 회복을 위한 최종 메시지

기술은 수단입니다.
사람이 목적입니다.

-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 지방이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어야 국가가 있습니다.
- 정확히 또 안전하게 연결하고, 동일한 잣대로 재고, 스스로 설 능력을 키워 줍니다. 그러고도 남는 위험은 집중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수요·데이터·지역을 연결하는 국가 시스템 혁신입니다.

23

MEMO

국민경제자문회의-KDI 정책 포럼

AI 시대,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패널토론

좌 장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토론자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장
김재준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
이윤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세직 KDI 원장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토론문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장

1. 문제의식: 진짜성장의 물적 토대는 어디에 있는가

김세직 원장께서 제시하신 아이디어 주도 진짜성장론은 모방과 주입식 축적에 의존해온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짚었고, 류근관 교수께서 제시하신 성장잠재력 제고 전략은 데이터와 제도 인프라가 새로운 성장의 전제조건임을 환기한다. 토론자는 한 가지 질문을 보태고자 한다. 아이디어가 부가가치로 바뀌려면 이를 물리적 세계에서 구현하는 변환 장치가 필요하며, 한국 경제에서 그것은 여전히 제조업이다. 제조업은 국내 부가가치의 약 4분의 1,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한국의 비교우위 그 자체다. 문제는 이 비교우위를 지탱해온 제조업 1.0 모델, 즉 대규모 자본 투입과 규모의 경제, 빠른 추격에 기반한 모델이 수확체감 국면에 이미 진입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범용 제조업에서 이미 한국을 추월했고, AI,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도 국가 자본을 동원해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이제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 투입 확대도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즉, 요소 투입형 성장으로 버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종결되었다는 진단에는 이론이 없다. 관건은 이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이다.

2. 제조업 2.0: 제조 현장을 지능 생성의 플랫폼으로

토론자의 제안은 제조업의 폐기가 아니라 재정의다. 제조업 2.0이란 제조 현장을 재화 생산의 공간을 넘어 지능을 생성하고 축적하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암묵지의 자산화다. 한국 제조업의 진짜 경쟁력은 설비가 아니라 30년간 축적된 공정 노하우, 즉 수율을 끌어올리고 불량을 잡아내는 현장의 암묵지가 가진 경쟁력에 있다. 이를 AI가 학습 가능한 데이터 자산으로 형식지화하면, 은퇴와 함께 소멸되던 지식이 복제 가능하고 누적 가능한 자본이 된다. 둘째, 피지컬 AI와의 내밀한 결합이다. 생성형 AI의 다음 단계는 물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이며, 그 학습에는 고품질 실세계 데이터가 필요하다.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정밀기계에 이르는 한국의 제조 현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정 데이터를 생산하는 원천이다. 한국은 AI의 소비자가 아니라, 피지컬 AI의 최대 수요처이자 최고 품질의 학습 데이터 공급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AX 이전에 DX가 우선이다. 따라서 셋째, 제조 AI 디자인하우스의 육성이 필요하다. 개별 중소 제조기업이 자체적으로 AI 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반도체 산업의 팹리스-파운드리 분업처럼, 산업별 공정 파운데이션 모델과 설계/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군을 육성하여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분업 구조로 확산시켜야 한다.

3. 항구적 지능생성 경제: GDP에서 GDI로

AI 시대 성장의 본원적 원천은 지능의 생산과 축적이다. 토론자는 이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국내총지능(GDI: Gross Domestic Intelligence), 즉 한 경제가 단위 기간에 생성 및 활용하는 지능의 총량을 제안해 왔다. GDI는 컴퓨팅, 에너지, 데이터, 인재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되어 산출되며, 어느 한 요소의 병목이 전체를 제약한다. 주목할 점은 지능이 비경합적이고 누적적인 자본이라는 사실이다. 물적 자본과 달리 지능은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고 재결합을 통해 스스로를 증식시킨다. 이는 이미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제학에서 목도한 바 있다. 지능 축적이 수확체증 구간에 진입하면 성장은 일회성 도약이 아니라 항구적 과정이 된다. 이것이 항구적 지능생성 경제의 요체이며, 김 원장께서 말씀하신 장기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경로라고 볼 수 있다. 역으로, 추론 주권 없이 지능을 전량 해외 API에 의존하는 경제는 결국 지능 무역 순 적자국으로 전락한다. 모든 산업의 한계비용에 토큰 비용이 부과되는 구조에서, 급등하는 지능 수입 비용은 사실상 21세기의 오일쇼크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이 추구하려는 소버린 AI는 기술 국수주의가 아니라 교역조건과 거시 안정성의 문제다.

4. 주최 측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반도체 생태계 보완점 및 국가 지원 방안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방향적으로 타당하나, 팹 증설과 시설 투자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생태계 관점에서 다음의 보완이 시급하다. 첫째, 전후방 생태계의 동반 스케일업이다. 팹 중심 투자에 비해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첨단 패키징(후공정)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AI 반도체 시대의 부가가치는 전공정 미세화 못지않게 첨단 패키징과 설계-공정 최적화(co-optimization)에서 창출되므로, 팹 투자와 생태계 투자를 일정 비율로 연동시키는 매칭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인프라 병목의 선제적 해소다. 첨단 팹과 AI 데이터센터가 전력/용수/송전망/도로망

등을 두고 경합하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고 있으며, 행정적 인허가 리드타임은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쟁국 대비 길다. 전력망이나 용수 인프라 투자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국가 전원 계획과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인프라 완공 시점을 팹 가동 시점과 동일한 시간축 위에 놓아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관리해야 한다.

셋째, 인력 양성의 구조 전환이다. 한시적 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한 학부 정원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장 공정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공유팹/가상팹(디지털 트윈) 실습 인프라, 대학원 중심의 고급 연구인력 양성,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및 영주권 같은 정주 여건 개선을 포괄하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앞서 제조업 2.0에서 강조한 대로, 은퇴를 앞둔 베테랑 엔지니어의 공정 암묵지를 AI 학습 가능한 교육이나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은 인력난과 지능 축적을 동시에 해결하는 이중 배당(double dividend) 정책이 될 수 있다.

질의 2. 글로벌 반도체 협력구도 대응 및 핵심 IP 확보 과제

우리 기업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경쟁과 협력이 동일한 상대와 중첩되는 구조로 판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최대 고객인 하이퍼스케일러와 AI 칩 설계기업들이 자체 칩 설계로 잠재적 경쟁자가 되고 있으며, 아키텍처와 표준의 결정권이 수요 측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한국 기업의 진짜 위험은 기술 열위가 아니라 '교체 가능한 공급자'로 위치가 고정되는 것이다. 커스텀 HBM은 그 전환의 분기점이다. 베이스 다이에 고객의 핵심 알고리즘이 임베딩되는 순간 메모리는 범용재가 아니라 이제 공동 설계(co-design)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 흐름을 수동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PIM, PNM, CXL 기반 메모리 풀링, 메모리 중심 컴퓨팅 아키텍처를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쪽으로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 국내 NPU 및 AI 가속기 기업과 메모리 기업 간 공동 설계 컨소시엄을 통해 국내에서 먼저 레퍼런스를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핵심 IP 확보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메모리-로직 인터페이스와 커스텀 베이스 다이 설계 IP, (2) 하이브리드 본딩 등 첨단 패키징 공정 IP, (3) 와트당 토큰 생산성을 좌우하는 저전력 설계 IP, (4) 이기종 메모리를 통합 운용하는 메모리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 스택이다. 특히 JEDEC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차세대 규격을 주도하여 표준필수특허와 인터페이스 길목의 IP를 가능한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특허의 양적 축적보다 훨씬 중요할 것이다. 요컨대 메모리라는 비교우위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기존의 메모리 문법을 넘어서는 것이다.

5. 정책 제언

1. 메모리 중심 AI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스택의 수직 통합: 한국이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비교우위(HBM, PIM, CXL)를 컴퓨팅 주권 확보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잇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일관된 스택으로 통합 설계해야 한다.

2. 제조 AX의 전면화: 산업별 공정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기업 간 데이터 신탁 제도, 제조 AI 디자인하우스 육성을 3대 축으로 하여 대기업-중견-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지능 전이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

3. 에너지-컴퓨팅 이중 병목의 동시 해소: 지능 생성의 한계비용은 결국 전력의 한계비용이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국가 전원 계획과 통합하고, 무탄소 전원과 송전망 투자를 컴퓨팅 인프라 투자와 동일한 시간축에서 집행해야 한다.

4. 측정과 제도의 혁신: 류 교수께서 강조하신 통계 인프라 논의를 확장하여, GDP 보조지표로서 지능 생성·활용을 측정하는 GDI 위성계정을 도입하고, 지능 자산에 대한 회계·세제·규제 특례를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6. 맺음말

진짜성장이란 결국 한 경제의 지능 생성 역량이 성장하는 것이다. 제조업 2.0은 아이디어 주도 성장의 물적 토대이며, 항구적 지능생성 경제는 성장잠재력의 새로운 원천이다. 아이디어와 제조, 지능과 물질이 결합될 때 한국은 축적의 시간을 넘어 생성의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발제가 제시한 방향에 이 토론이 실행의 경로를 보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토론문

김재준 국민대학교 경상대학 명예교수

AI 시대, 아이디어와 창의성은 어떻게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가

핵심 주장. 경제성장은 완성된 기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기술이 생겨나기 전에 아이디어가 있다. 한 국가는 낯선 질문과 가능성을 넓게 제시하고, 여러 경로로 평가하고, 오래 보존한 뒤 연구 가능한 문제로 바꾸어야 한다. AI가 정형화된 전문업무를 빠르게 처리할수록 정해진 답을 실행하는 능력보다 새로운 질문을 만들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능력이 더 희소해질 가능성이 크다. 창의성은 개인의 재능인 동시에 이 과정 전체가 돌아가게 하는 사회의 역량이다.

1. 성장의 출발점은 기술이 아니라 아이디어다

전통적인 성장 이론은 노동, 자본, 기술을 핵심 투입요소로 본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은 아무 배경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술의 앞에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과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표현, 개념, 정리와 상상이 있다. 오늘 생산에 쓰이는 기술은 어제 제기된 아이디어 가운데 일부가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 구현된 결과다. 성장의 원인을 기술에서만 찾으면 기술이 생겨날 수 있게 한 사회적 조건을 놓치게 된다.

여기서 아이디어는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발명과 다르다. 세계를 새롭게 나누고, 보이지 않던 관계를 드러내며, 기존 해법이 당연하게 여긴 경계를 의심하게 하는 가능성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예술은 예술 장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문학, 수학, 기초과학처럼 경제적 용도와 구현 방법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창조적 기초탐색까지 포함하는 분석상의 개념이다. 이런 탐색이 곧바로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개발이 앞으로 다룰 질문과 조합의 범위를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의 단순한 수가 아니다. 후보가 많아도 모두 비슷한 문제만 맴돈다면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각 아이디어가 기존 지식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문제거리'라고 해 보자. 후보 아이디어들은 이 문제거리의 분포를 이룬다. 그 가운데 기존 지식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드문 후보가 **분포의 상단꼬리**다. 이는 인기나 작품가격이 아니라 질문의 새로움으로 정의된다. 다만 멀리 있다고 반드시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아니다. 상단꼬리는 새로움의 위치를 나타낼 뿐, 진리나 경제적 가치를 보증하지 않는다. 지금의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후보 가운데 일부가 적절히 해석되고 연결될 때 새로운 연구 방향을 열 수 있다.

2. 창의성은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사회의 탐색 능력이다

창의성을 소수 천재의 속성으로만 보면 정책은 유명 인물을 찾아 지원하는 일로 좁아진다. 그러나 사회의 창의성은 훨씬 넓은 기반에서 생긴다. **일반 창작자와 탐색자의 수**가 많고 그들의 배경과 방법이 서로 다를수록 독립적인 시도가 거듭되고, 표현의 언어와 문화적 기억도 쌓인다. 똑같은 시도만 반복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이런 넓은 기반은 연구로 발전할 문제를 꾸준히 공급하고 아주 낯선 아이디어가 한 번이라도 나올 가능성을 높인다.

3. 일반 창작자와 초격차 아티스트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일반 창작자의 기반과 **초격차 아티스트**의 존재는 모두 중요하지만 같은 현상은 아니다. 초격차 창작자는 정부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별도의 유형이 아니다. 아주 낯선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여러 평가를 견디며, 오랫동안 영향을 남겼을 때 비로소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상단꼬리의 사례다. 한 명의 뛰어난 인물이 일반 창작자의 층을 자동으로 만든다고 볼 이유도 없다. 넓은 창작 기반은 꾸준한 참여와 훈련에서 생기고, 초격차의 출현은 아이디어의 생성·평가·보존이 드물게 맞물린 결과다.

어떤 사회에 초격차 창작자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 일반 창작자가 적어 아이디어의 풀이 좁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혁신적인 예술가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낯선 표현이 중앙집중적인 심사에서 너무 빨리 탈락하거나, 좋은 후보가 기록되지 못했거나, 다른 분야가 이해할 언어로 옮겨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구분은 '우리 국민에게는 천재가 없다'는 식의 문화결정론을 피하고 실제 병목이 어디인지 묻게 한다. 한국은 초격차 아티스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를 알아 보는 눈이 없거나 평가제도가 부재한 것은 아닐까?

4. 제도는 낯선 아이디어의 생존확률을 결정한다

제도는 명령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장치가 아니다. 누가 말할 수 있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어떤 후보가 몇 번의 평가기회를 얻는지, 실패한 시도가 기록되는지, 그리고 한 분야의 가능성이 다른 분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칙이다.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라도 제도가 다르면 끝까지 살아남는 질문은 크게 달라진다. 창의성은 개인의 머릿속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표현·평가·보존의 제도 속에서 형성된다.

이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체제의 이름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이의제기 가능성,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경쟁을 뜻한다. 기존의 평가 경로를 없애지 않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경로가 하나 더 생긴다면, 낯선 아이디어가 적어도 한 곳에서 발견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는다. 중앙의 판단이 틀려도 다른 기관이나 공동체가 그 아이디어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모든 아이디어를 더 옳게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낯선 가능성을 너무 일찍 잃을 위험을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다.

물론 평가 경로가 많아지면 비용도 늘고, 가능성이 낮은 아이디어를 붙잡아 두는 오류도 생길 수 있다. 한정된 예산을 여러 기관에 나누면 평가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다. 평가자들이 같은 기준과 인맥을 공유한다면 기관 수가 늘어도 다원성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좋은 제도는 심사 횟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 공개된 판단 근거, 재심 가능성, 장기평가와 보존 책임을 함께 갖춰야 한다. AI를 통한 평가와 심사라는 새로운 영역도 그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 핵심은 정부가 정답을 대신 고르는 데 있지 않다. 사회가 틀린 뒤에도 다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5. 정부 정책은 창작 지원을 넘어 연결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첫째, 넓은 탐색 기반을 지켜야 한다. 정부의 첫 목표는 초격차 인물을 행정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예술가·인문학자·수학자·기초과학자가 오랫동안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지키는 것이다. 교육, 창작공간, 기초연구, 소규모 지원과 실패 뒤 다시 시작할 기회가 아이디어의 풀을 넓힌다.

둘째, 평가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지원기관과 심사 경로가 실제로 독립되도록 하고, 비주류 아이디어에도 재심과 기록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빨리 측정할 수 있는 성과만 요구하면 낯선 아이디어는 가치를 드러내기도 전에 사라진다.

셋째, 분야를 잇는 조직을 성장정책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예술과 기초지식에서 나온 가능성을 연구 질문, 설계 언어와 실험 과제로 바꾸는 사람과 조직이 필요하다. 분야를 넘나드는 레지던시, 공동연구소, 장기 아카이브와 전문 기획자는 문화정책과 과학기술정책 사이의 빈틈을 메울 수 있다. 수학자와 미술가와 소설가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창의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

6. 아이디어가 기술과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경로

성장의 연결고리. 아이디어 후보 → 독립적인 평가 → 검증과 보존 → 연구 문제로의 전환 → R&D를 통한 기술 후보 개발 → 시장과 공공부문의 선택·구현 → 생산성·소득·후생의 증가

이 경로에서 예술적·기초적 아이디어가 곧 기술이나 경제적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평가는 미래에 쓸 수 있는 선택지를 남기는 단계다. 번역은 남겨 둔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 질문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R&D는 그 질문에 자원과 실험을 결합해 기술 후보를 만든다. 그 뒤 기술을 선택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 단계를 나누어 보아야 예술을 성장의 만능 원인으로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문화적 기반이 왜 기술혁신의 앞단에서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예술과 문화서비스는 사람들이 누리는 효용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직접효과도 낸다. 그러나 다른 부문의 수요와 인력이 문화산업으로 옮겨온 것이라면 경제 전체의 순증 효과는 작을 수 있다. 문화산업이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경제 전체의 장기 성장률까지 계속 높아진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장기 성장에 관한 이 글의 핵심 경로는 간접적이다. 창조적 탐색이 아이디어 분포를 바꾸고, 제도가 낯선 후보를 보존하며, 분야 간 연결과 R&D가 그 후보를 기술로 구현하는 경로다.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효과와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구분해야 정책의 성과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인과관계의 반대 방향도 존재한다. 소득이 늘면 예술 소비와 기부, 공공지원과 기초연구 투자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예술활동이 활발한 나라가 부유하다는 사실만으로 예술이 성장을 일으켰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이 글의 주장은 같은 소득과 자원 수준을 전제로 할 때에도 어떤 사회가 낯선 아이디어를 만들고 보존하고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장기 혁신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건부 주장이다. 실제 인과효과는 제도 변화나 장기 자료를 이용해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7. 기술 프런티어에 가까울수록 낯선 아이디어가 중요해진다

기술 수준이 낮은 경제는 이미 알려진 기술을 도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프런티어에 가까운 산업에서는 손쉬운 문제가 먼저 풀린다. 비슷한 성장 속도를 유지하려면 기존 지식에서 더 멀리 떨어진 질문을 찾아야 한다. 이때 통상적인 연구 경로 밖에 있는 아이디어, 곧 분포 상단꼬리의 **상대적 중요성**이 커진다. 고소득 경제에서 초격차 창작자와 높은

수준의 기초탐색이 더 중요해진다는 주장은 모든 산업과 나라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 프런티어에 가까운 부문에 관한 조건부 명제다.

상대적 중요성이 커진다고 실제 성장효과까지 자동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후보가 나올 확률, 그것을 연구 문제로 바꾸는 능력, 연구 인력과 투자, 그리고 새 기술이 만들어 낼 생산성 향상이 연구생산성의 하락을 상쇄해야 한다. '예술 없이는 언젠가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강한 결론도 다른 문제 원천이 약해지고 창조적 기초탐색만이 충분히 먼 질문을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만 성립한다. 이 조건을 밝혀 두어야 이론을 경험적으로 반박하거나 지지할 수 있다.

8. AI는 인간 전문가의 독점적 지위를 흔든다

자동화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한꺼번에 대체하기보다 특정 능력을 표준화해 기계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산업혁명의 기계는 근력을, 대량생산 체제는 장인의 반복 동작을, 컴퓨터는 계산·기록·검색과 정형화된 사무를 자동화했다. 생성형 AI는 이 흐름을 언어, 이미지, 코드와 전문 문서의 작성까지 넓힌다. 핵심은 지식이 사라지는 데 있지 않다. 오랫동안 전문가만 다룰 수 있었던 절차와 표현 도구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데 있다.

그 결과 변호사, 회계사, 의사, 교수, 프로그래머처럼 자격과 지식의 희소성 위에 세워졌던 전문가의 독점적 지위가 약해질 수 있다. 일반인도 AI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초안을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제품 코드를 작성하며, 낯선 학문의 논의를 따라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곧바로 숙련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판단하고 윤리적·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여전히 인간과 제도의 몫이다. 약해지는 것은 전문성 자체라기보다 정형화된 전문업무에 대한 배타적인 접근권이다.

전문 도구가 널리 보급되면 분야 사이의 경계도 유연해진다. 법률가가 코딩을 하고, 디자이너가 생명과학 자료를 다루며, 환자와 시민도 분석과 설계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 분야가 사라진다기보다 경계에서 지식을 해석하고 결합하는 일이 일상화되는 것이다. 이때 전문가의 가치는 정해진 절차를 빠르게 수행하는 능력에서 **무슨 질문을 던질지, 서로 다른 지식을 어떻게 결합할지, 결과에 어떻게 책임질지**를 판단하는 능력으로 옮겨 간다. 경제 전체가 창의성의 문제와 마주하게 되는 이유다.

9. 대규모 직업 전환의 시대에 사람들은 '강제로 예술가'가 된다

AI가 반드시 영구적인 대량실업을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과거의 자동화도 일부 직업을 없애면서 새로운 산업과 역할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전환에서는 육체노동, 사무노동과 일부 창작노동이 한꺼번에 재편될 수 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새 역할의 형성, 노동시간 단축, 재교육, 소득분배의 조정보다 빠르다면 대규모 실업과 불완전고용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필연적인 예측이 아니라 제도적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가능한 경로다. 문제는 일자리의 수만이 아니다. 사람이 경력과 정체성, 소득을 연결해 온 기존 질서가 흔들린다는 데 있다.

예술가의 위기이지 예술의 위기는 아니다. AI는 평균적인 이미지·음악·문장의 생산비를 낮춰 기존 예술가의 시장 소득과 그들이 누리던 희소성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을 표현할지, 어떤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지, 사회가 아직 묻지 않은 질문을 어떻게 드러낼지라는 예술의 기능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안정된 직업과 정해진 승진경로가 약해지면 많은 사람은 스스로 할 일을 정의하고, 서로 다른 능력을 조합하며, 자신의 작업을 타인에게 설명하고, 새로운 청중과 시장도 찾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사람들은 **'강제로 예술가가 된다'.** 모두가 화가나 무용가가 된다는 말이 아니다. 남이 정해 준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벗어나 자신의 문제와 작업 방식, 협력자와 가치를 스스로 구성해야 한다는 비유다. 다만 소득안전망 없이 이런 변화를 강요한다면 창의성이 아니라 불안정 노동을 미화하게 된다. 탐색할 자유와 실패를 견딜 물질적 기반이 함께 있어야 한다.

10. 경제는 예술화되고 경력은 작품처럼 재구성된다

경제의 예술화는 모든 상품이 예술품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표준화된 정보와 기술을 실행하는 비용이 낮아질수록 질문을 정하고, 경험을 설계하고, 서사와 정체성을 만들며, 서로 다른 분야를 독창적으로 잇는 능력의 가치가 커진다는 뜻이다. 기업도 정답을 효율적으로 반복하는 조직에서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의미를 만드는 조직으로 바뀔 수 있다. 생산과 예술, 소비와 참여, 전문가와 일반인의 경계가 느슨해질수록 경제활동은 열린 창작 과정에 가까워진다.

가령 AI 때문에 정형화된 법률업무를 잃은 변호사가 무용을 배우고, 몸의 움직임에 대한 지식과 규칙·책임에 관한 법적 지식을 결합한다고 해 보자. 그는 AI로 움직임 데이터를 분석해 재활·교육·공연을 잇는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다. **변호사 → 무용가 → 벤처창업가**라는 경로는 하나의 가능한 사례일 뿐 일반적인 예측은 아니다. 다만 법률가의 규칙 감각, 무용가의 신체 지식과 기술의 확장성이 새 문제를 중심으로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AI 시대의 인적자본은 한 직업의 자격만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력과 분야를 잇는 능력에서도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새로운 창의 생태계는 전환의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사람들이 생계 때문에 곧바로 다음 저임금

일자리로 밀려나지 않고 학습·창작·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소득안전망, 평생학습계좌, 이동 가능한 사회보험과 공공 창작공간이 필요하다.

분야 사이를 잇는 조직이 필요하다. 대학·예술기관·연구소·기업을 오갈 수 있는 레지던시, 분야를 잇는 기획자, 공동 프로젝트와 재도전 금융이 굴곡 있는 경력을 사회적 가치로 바꾸어야 한다.

평가제도는 경력의 공백보다 경험의 결합을 보아야 한다. 채용·투자·지원 심사가 단일 전공과 연속 경력만 보상하면 전문영역의 경계는 실제로 열리지 않는다. 서로 다른 경험이 어떤 새 질문을 만들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11. 초격차 아티스트는 창의사회의 결과이자 하나의 지표다

초격차 아티스트는 등장한 뒤 사회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과 질문의 틀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출발점을 한 개인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 먼저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회**가 있어야 한다. 일반 창작자와 탐색자가 충분히 많고, 낯선 아이디어가 표현되며, 여러 독립된 평가를 받고, 당장 쓸모가 없어도 보존되고, 다른 분야가 이해할 말로 옮겨질 때 초격차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먼저 사회의 문제공간과 제도가 초격차 인물의 출현 가능성을 높이고, 출현한 인물이 다시 사회의 언어와 질문을 바꾸는 것이다.

이 때문에 **초격차 아티스트의 존재**는 그 사회의 창의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과학·건축·예술에서 기존의 틀을 새로 짠 인물이 반복해서 나온다면, 낯선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사회가 그것을 알아보고 보존하며 국제사회가 이해할 언어로 소개할 능력도 갖췄다는 신호가 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불완전한 지표다. 국제상은 성취를 늦게 반영하고, 인구와 연구비 규모, 언어, 분야별 관행, 국제 네트워크와 심사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수상자가 없다고 창의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수상자가 있다고 생태계 전체가 건강한 것도 아니다.

한국의 사례는 이 구분을 생각하게 한다. **K-pop과 K-drama**는 한국이 기획, 제작, 훈련, 상업화, 세계시장에 맞춘 해석과 유통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 준다. 반면 2026년 8월 현재 공식 역대 수상자 목록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적의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와 프리츠커상 수상자는 아직 없다. 두 사실은 분야와 평가제도가 다르고 성과가 축적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다르므로 한국 문화 전체의 순위를 매기는 직접 지표가 될 수 없다. 특히 수상자의 부재만으로 한국의 순수예술과 순수과학 전체가 낮은 수준이라고 증명할 수는 없다. 다만 상업적 대중문화에서 확인된 세계적 조직력과 확산 능력에 비해, **장기적이고 비상업적인 탐색이 세계 최상위권의 성취로 이어진 사례**가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는 있다. 이는 결론이 아니라 검증해야 할 가설이다.

이 가설이 맞다면 문제는 개인의 재능보다 제도의 병목에 있다. 한국은 시장성이 확인된 콘텐츠를 빠르게 골라 규모를 키우는 능력은 강한 반면, 성과가 오랫동안 불확실한 기초탐색을 지탱하고 비주류 질문을 여러 경로로 평가하며 국제 학계와 예술계가 이해할 언어로 소개하는 장치는 약할 수 있다. 이 역시 자료로 확인해야 할 주장이다. 정책 목표는 노벨상이나 프리츠커상 수상자를 직접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성취가 우연한 예외에 그치지 않고 되풀이될 수 있는 탐색·평가·보존·연결의 생태계, 즉 플랫폼**을 세우는 데 있어야 한다. 정부가 소수의 '될 사람'을 미리 골라 자원을 몰아주면 이미 알아볼 수 있는 성취만 강화할 위험이 있다.

12. 기본소득과 새로운 정치제도의 가능성

임금노동이 소득분배와 사회적 지위의 중심이라는 전제가 약해지면 **기본소득**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기본소득은 실업자를 뒤늦게 돕는 복지에 그치지 않고, 시민에게 학습·돌봄·창작·창업을 시도할 시간을 주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하고 결실까지 오래 걸리는 탐색은 단기 시장 소득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조건 없이 지급되는 소득은 실패를 감수할 시간과 협상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주거·의료·교육 같은 기본서비스, 직장을 옮겨도 이어지는 사회보험, 평생학습, 공공 프로젝트와 창업금융, 독점적인 AI 플랫폼에 대한 경쟁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재원, 물가, 노동공급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검증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자동화의 유일한 해답이 아니라 직업 전환을 창의적인 선택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제도 가운데 하나다.

정치제도도 달라질 수 있다. 한 사람이 평생 하나의 직업집단에 머물지 않는다면 산업·직능별 대표만으로 이해관계를 조직하기 어려워진다. 시민은 노동자, 창작자, 학습자, 돌봄자와 창업가의 역할을 오갈 수 있다. 시민의회, 참여예산, 동료평가 방식의 공공 창작기금, 플랫폼 협동조합과 알고리즘 감사 같은 제도가 이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이것은 예측이라기보다 가능한 제도 방향이다. 새로운 정치는 정부가 하나의 미래를 정하는 정치가 아니라 여러 사회적 실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다시 평가하는 **민주적 탐색의 정치**에 가까워질 수 있다.

13. AI 시대 문화예술 정책의 전환: 하나의 정책 실험

정책의 성과지표가 바뀌어야 한다. 행사 횟수, 관객 수, 단기 매출뿐 아니라 일반 창작자가 얼마나 오래 활동하는지, 창작자의 배경과 장르가 얼마나 다양한지, 독립적인 평가 경로와 비주류 아이디어의 보존

기회가 있는지, 아이디어가 연구 문제로 이어지는지를 살펴야 한다.

지원의 단위는 작품만이 아니라 생태계여야 한다. 창작자에게는 탐색할 시간과 실패 뒤 다시 도전할 기회를, 평가기관에는 독립성과 책임을, 아카이브에는 장기 보존 능력을, 분야를 잇는 조직에는 여러 언어를 이해하는 전문성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결과를 직접 만들어 내기보다 이 연결망이 끊기는 지점을 보완해야 한다.

예술가 지원과 시민의 창작 참여를 함께 보아야 한다. 전업 예술가가 활동을 이어 갈 기반을 보호하면서 일반 시민도 전문 분야의 경계를 넘어 창작·학습·창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예술가의 전문성을 약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예술을 떠받치는 사회적 기반을 넓히는 정책이다.

14. 맺음말

경제성장은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 쓰일 때 실현되지만, 그 시작은 무엇을 새로운 문제로 볼 수 있느냐에 있다. 아이디어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창의성**은 그 가능성의 범위와 분포의 상단꼬리를 넓힌다. **정부 정책과 제도**는 누가 말하고 평가받으며, 어떤 아이디어가 보존되고 다른 분야로 이어질지를 좌우한다. AI가 정형화된 전문업무를 널리 자동화할수록 정해진 답을 실행하는 능력보다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능력이 더 귀해질 수 있다. 이 전환을 불안정의 강요가 아니라 창의적인 선택의 확대로 바꾸려면 넓은 창작 기반, 독립적인 평가, 분야 사이의 연결, 소득안전망과 민주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예술이 성장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예술을 포함한 창조적 기초탐색은 성장 뒤에 붙는 장식에 그치지 않는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질문을 만들고 오래 살려 두는 혁신의 중요한 기반이다.

자료 확인(2026년 8월)

Nobel Prize, 'All Nobel Prizes'(1901–2025 과학부문 포함); The Pritzker Architecture Prize, 'Laureates'(1979–2026).

토론문

이윤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요약: 핵심은 하드웨어 공급이 아님. 제품화와 시장이 성장경로를 결정함

AX 시대 스타트업 혁신의 핵심은 AI서비스 기업이 기술을 제품으로 만들고, 첫 고객을 얻어 반복 판매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작동하는가에 있음.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SI와 계열 내부거래 중심의 수요를 개방형 제품·SaaS 시장으로 전환해, 제품개발이 실제 구매와 반복매출로 이어지는 경로가 확보되어야 함.

AI서비스기업 대 AI반도체기업: AI반도체와 기반모델은 대규모 고정비, 컴퓨팅 인프라,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므로 전략적 공급역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AI서비스와 SW는 좋은 기술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제품화, 첫 고객과 레퍼런스, 외부시장 접근, 반복 판매,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비 부담이 더 직접적인 병목으로 작용한다. 반도체와 기반모델에 유효한 공급 중심의 정책수단을 AI서비스 기업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AI서비스산업 성장의 중요성: AI서비스 스타트업은 AI 기술을 경제 전체의 생산성으로 전달하는 연결고리다. AI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GPU나 모델 보유 자체보다 기업의 실제 도입과 업무과정의 변화에서 결정된다. 범용 AI 기술을 제조·물류·유통·금융·전문서비스의 구체적 문제에 맞는 제품으로 바꾸는 주체가 AI서비스 기업이다. 즉, 광범위한 산업 및 기업군의 생산성을 올리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다. 한국이 제조업에서 축적한 공정·품질관리·설계·공급망의 현장지식을 표준화된 산업 SW·AI로 제품화할 수 있다면, 그 지식은 개별 대기업의 내부 효율을 넘어 여러 기업이 반복 사용하고 수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조업의 현장지식 → SW·AI 제품화 → 반복판매·Scale-up → 전 산업 생산성 확산

따라서 AI 스타트업의 중요성은 단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안된다.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시험하고, 기존 기업과 다른 제품을 제시하며, AI의 확산경로를 넓히는 주체라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봐야 한다. 잠재성장력을 높이려면 기술 공급뿐 아니라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1. AI서비스 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의 AI 도입의 구분과 연결

'AI 스타트업 지원'과 '일반 중소기업의 AI 도입 지원'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으면 양쪽의 병목을 모두 놓칠 수 있다. **AI서비스 스타트업은 공급기업**이다. 이들에게는 제품화, 고객 접근, 지식재산권과 레퍼런스 확보, 이를 통한 반복매출과 성장자금이 핵심이다. 반면 **일반 중소기업은 주로 AI서비스의 수요기업**이다. 무엇을 도입할지 진단하고, 내부 데이터를 정비하며, 업무절차를 바꾸고, 추론·보안·재학습·유지관리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두 집단은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 AI서비스 스타트업에는 제품을 사줄 시장이 필요하고, 일반 중소기업에는 검증되어 도입비용이 낮은 제품이 필요하다. 공급기업 보조와 수요기업 바우처를 각각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검증된 제품이 실제 구매·구독으로 이어지고, 여러 기업에 다시 판매되면서 확산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두 과제를 연결하는 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2. 스타트업의 문제는 창업보다 성장: 병목은 제품화와 반복 판매가 어려운 구조

보다 근본적인 질문: IT 강국 한국에서, 왜 IT서비스는 제조업과 같은 성장을 만들지 못했는가?

한국 SW산업의 특징은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낮다기보다는 경제 내 규모가 작다는 데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IT서비스(J62·63)의 한국 노동생산성은 약 94로 OECD 평균 97과 유사한 반면, 고용비중은 약 0.85%로 OECD 평균 1.59%의 절반 수준이다(OECD STAN 2025). 이 사실은 문제의 초점을 기업 수나 기술력의 절대적 부족보다, 생산적인 기업이 제품화·외부시장 진입·글로벌 확장을 통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구조적 특징: 계열사 중심의 내부시장(captive market)과 인력투입형 SI 사업모델은 제품기업의 성장경로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IT서비스 산업은 전통적으로 대기업의 안정적인 계열 내부수요에 의존했다. 이는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기술역량을 축적하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고객마다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투입인력에 비례해 대가를 받는 구조에서는 매출 증가가 인력 증가를 수반한다. 또한 이미 개발한 기술을 모듈·제품·SaaS·API로 전환해 여러 고객에게 반복 판매하기 어렵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표준화된 상용제품보다 개별 수요에 맞춘 시스템 구축을 선호할 경우, 공급기업 역시 제품의 표준화와 범용화에 투자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이는 공급 측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 IT서비스 수요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이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품화를 통해 시장을 키우고 수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

Customized SI → Module → Product/SaaS → Global recurring revenue

AI격차와 확산의 문제: "AI 기술 자체가 이러한 장벽을 자동으로 낮춰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과거 닷컴 붐이나 모바일 앱 개발 호황기에 비해, AI 서비스는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처리 등으로 인해 초기 진입비용과 지속비용이 훨씬 높아졌다. 이러한 비용 구조는 기업 현장으로의 AI 확산을 제약하고 있다. AI의 성장효과는 기업 현장으로의 확산에 달려 있지만, 국내기업의 AI 활용률은 대기업 48.8%, 중견기업 30.1%, 중소기업 28.7%로 기업규모별 격차가 이미 뚜렷하다(2024년 대한상의·산업연구원, 국내기업 500개사 조사). 현재의 핵심 문제는 기술의 존재 여부보다 '확산의 격차'에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현장 간담회에서도 같은 병목이 확인되었다. AI서비스 기업과 수요기업은 컴퓨팅 비용뿐 아니라 활용데이터의 탐색·정제·표준화·검증, 모델 튜닝, 개인정보·저작권 검토, 보안과 전문인력 확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 한 기업은 B200 GPU 임대비용을 월 640만원, 연 7,680만원 수준으로 제시했고, 다른 현장업체는 데이터 전처리가 전체 프로젝트 기간의 60~7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 평균 통계가 아니라 현장 경험이지만, 지원이 존재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지속적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지원사업이 초기 구축비와 PoC에 집중되고 유지보수·재학습·업그레이드 예산이 빠지면, 성공한 시범사례도 실제 구매와 지속적 활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3. 가장 시급한 정책: '첫 고객-구매-반복판매'를 잇는 개방형 수요시장

1) 첫 고객을 만드는 조달체계가 필요

공공기관과 선도기업이 AI 제품의 첫 고객(reference customer)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타트업기업이 실제 업무에 제품을 시범 도입할 기회를 얻고, 성과가 확인되면 구매·구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선정 기준은 계열 여부·업력·기존 수주실적이 아니라 해결할 문제와 기능·성능이 되어야 한다. 발주기관은 데이터 조건과 성능·보안·상호운용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스타트업에도 기회를 열어 줘야 한다. 시범도입이 일회성 과제로 끝나지 않고 첫 매출과 레퍼런스로 이어져야 한다.

2) 새로운 용역보다 개발된 제품을 먼저 사는 구조로 바꿔야

공공 SW 발주와 대기업 구매는 상용 SW·SaaS·기존 모듈을 먼저 검토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커스터마이징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예산 지출도 인력 몇 명을 몇 개월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성능, 사용량, 비용과 업무시간 절감 등 성과에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공급기업이 범용 모듈과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다른 고객에게 다시 판매할 수 있어야 제품화의 유인이 생긴다. 수요 측 발주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공급기업에 대한 보조금만으로는 제품화와 스케일업을 만들기 어렵다. 제품이 아닌 인력을 사는 현재의 사업 구조는 수출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3) AI 계약은 단년도 구축비가 아니라 다년도 총운영비를 담아야

SaaS 구독료와 사용량 기반 계약을 허용하고, 모델 사용(추론)·데이터 갱신·보안·재학습·유지보수·업그레이드를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AI는 한 번 구축하면 끝나는 설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예산과 조달체계도 단년도 개발용역 중심에서 다년도 총운영비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4) 데이터·규제·금융 지원은 이 성장경로를 작동시키는 수단

공공데이터는 개방 건수보다 적시성·해상도·기계판독성·메타데이터·법적 이용조건을 기준으로 AI-ready 수준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기업마다 반복하는 전처리와 법률검토의 공통 고정비를 줄이고, 개인정보·저작권·공공데이터 활용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모든 창업기업에 지원을 고르게 나누기보다 제품화, 첫 구매, 비계열 고객, 반복매출, 민간 후속투자 등 단계별 성과를 확인해 후속 지원을 집중하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4. 정책의 목표는 기업 보호가 아니라 기업 역동성을 만드는 것

Ufuk Akcigit의 연구가 강조하듯 혁신성장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지 않다.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고 생산적인 기업이 성장하며, 인재와 아이디어가 더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역동성과 경합가능성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데이터·자본·글로벌 유통망은 AI 사업화에 필요하다. 동시에 스타트업이 고객·인재·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더 나은 제품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그 규모의 이익이 경제 전체의 혁신으로 연결된다.

정책 성과도 GPU 배정량, 선정기업 수, PoC 건수가 아니라 구매전환율, 비계열·반복고객 수, 2년 후 지속사용률, 스타트업의 반복매출과 고객기업의 생산성 개선으로 평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스타트업에 필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경험이 아니라 고객에게 선택되고 반복해서 판매되는 경험이다. AI서비스의 제품화와 첫 시장, 반복구매와 스케일업을 연결할 때 AI는 일부 선도기업의 혁신을 넘어 경제 전체의 '진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토론문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늘 제 기조발표의 핵심은, AI 시대에는 개별 정책을 몇 가지 더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가 운영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장잠재력 둔화, 고령화, 청년 유휴, 지방 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AI는 제조, 금융, 행정, 교육, 노동시장을 함께 바꾸는 범용기술입니다. 따라서 큰 AI 모델 하나를 더 만드는 것보다 데이터와 컴퓨팅, 인적자본, 교육·산업·지역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고, 국민이 생애에 걸쳐 계속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은 평균을 끌어올리는 데서 개인의 강점과 비교우위를 키우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은 일자리 자체보다 사람의 전환능력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은 분산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이 방향을 실제로 성공시키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느냐.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정책의 출발점은 데이터 연결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부처별 행정자료가 흩어져 있어 어떤 정책이 누구에게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중복지원과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정확히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인구, 가구, 교육, 고용, 소득, 자산, 복지, 연금, 기업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책 집행과 효과 측정은 가급적 분리해 독립적인 전문기관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은 많이 하는 것보다 무엇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모든 정책을 가능한 한 같은 잣대로 재야 합니다.

포용성장은 선의나 예산 규모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정말 취약한지, 소득은 낮지만 자산은 충분한지, 누가 실제 현금흐름 부족, 즉 유동성 갭에 빠져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소득, 이전소득, 세금과 사회보험료, 자산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소득까지 종합한 개인화된 통합소득지표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교육훈련이 필요한 사람, 주택연금 같은 자산유동화가 필요한 사람, 정부의 직접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AI 시대의 포용정책은 현금지원 이전에 역량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AI는 반복업무뿐 아니라 상당한 인지업무까지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중간숙련 일자리가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의 가치는 더 커질 것입니다. 국민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시 배우고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학교에서 한 번 배우고 평생 일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학교, 노동시장, 재교육, 복귀가 반복되는 체계, 즉 역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끌어올리는 (s,S)형 평생 인적자본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4. 추진 방식은 분산지원보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빠른 평가와 환류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R&D 투자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더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입니다. AI도 모든 분야에 조금씩 나눠주기보다 제조업+AI, 바이오+AI, 첨단제조, 에너지 전환처럼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버린 AI 역시 “세계 몇 위 모델”이라는 순위 자체보다 외부 충격에도 국가 핵심기능이 작동하는 회복탄력성, 협상력, 산업별 활용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책은 처음부터 평가 가능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사업이 끝난 뒤 성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어떤 데이터를 쓰고 어떤 집단과 비교하며 무엇을 성과로 볼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한 정책은 빨리 고치고 성공한 정책은 빠르게 확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I 시대에는 오히려 포용이 생산성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자기 강점을 발견하고 더 자주 다시 배우며,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지원이 가고, 기업과 지역이 AI를 실제 생산성 향상에 활용할 수 있다면 포용과 성장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기존 일자리를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속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 4종 정책제언의 표현으로 정리하면, 정확히 연결하고, 동일한 잣대로 재고, 스스로 설 능력을 키우며, 그래도 남는 위험은 집중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AI 시대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을 함께 이루기 위한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MEMO

MEMO


NEAC
국민경제자문회의
KDI
한국개발연구원